

아이 낳기 좋은 도시?...광주·전남 출산 인프라 취약

분만실 광주 43병상·전남 34병상 불과...대전 68병상과 큰 차이 신생아실도 132·168병상 전국 하위권...분만 건수 3년 연속 하락

광주·전남 지역의 분만실, 신생아실 등 출산 관련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아이 낳기 좋은 광주'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의료기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1일 공개했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제도 운영 결과를 통해 수집한 전국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재정현황, 급여실적,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을 종합한 결과다.

광주의 특수진료실 중 '분만실'은 43병상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57병상 중 2.4%에 불과한 수치이며, 인구가 비슷한 대전(68병상)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전남의 분만실은 34병상 뿐이었으며, 광주·전남은 세종(14병상), 제주(15병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병상·병상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신생아실은 132병상 뿐으로, 세종(48병상), 제주(66병상)에 이어 가장 적은 병상 수를 가진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의 신생아실은 168병상으로 충북(157병상)에 이어 전국 하위 5위였다.

산부인과 의원 수도 광주 36곳, 전남 19곳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전남은 세종(8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산부인과 의원 수가 적었다.

광주·전남 분만 건수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광주의 분만 건수는 2021년 1만 809건에서 2022년 9731건, 2023년 9310건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전남 또한 2021년 5680건, 2022년 5326건, 2023년 4864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분만 건수는 세종(2605건), 제주(3118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지역에 인프라가 없어 젊은 이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나서는,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영난에 문을 닫으면서 출산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던 대형 산부인과 문화여성병원이 지속적인 분만 감소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해 폐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학병원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해 타격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신생아를 관리할 의료진이 부족해진 데 따라 지난 7월부터 45병상이었던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33병상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광주·전남 고위험 산모들은 결국 타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고 있는 실정(9월 9일자 광주일보 1면·9월27일자 광주일보 6면)이다.

의료계에서는 쇠퇴해가는 지역 산부인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분만 건수가 하락하는 것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세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하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광주·전남에 출생인구가 자라나지 않으니 산부인과 수요도 급락하고 있는 추세로,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출생의 필수요소인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의료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불 밝힌 성탄 트리 2024 성탄트리 점등 행사가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광장과 분수대 주변으로 갖가지 성탄 조형물이 세워져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령운전자 화물차 사고 막아라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찾아가는 운전자자격 유지 검사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전남지역에서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운전자자격 유지 검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최근 해남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검사는 시야각검사, 신호등·화살표 등 반응능력검사, 기억력검사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공단은 이동 버스를 활용해 해남군의 고령운전자들을 직접 만나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부터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 토탈 케어 서비스' (고령운전자 위험 운전행동을 분석해 운전 습관 교정, 도로나 위험 운전 다발지점 등 환경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공단은 최근 전남 농촌 지역에서 소형화물차,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한 데 따라 교통사고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을 보면 전남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1905건(사망 87명, 부상 2869명), 2022년 1903건(사망 71명, 부상 2802명), 2023년 2159건(사망 82명, 부상 3286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의 최근 3년(2021~2023년) 간 고령운전자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108건으로, 전남 17개 군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해남에서는 목포(105건)·나주(70건)·광양(59건) 등 전남 일부 시·군보다도 많은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증가하는 전남 농촌지역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해남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해 광주·전남 지역 전반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노동청, 연말연시 상습체불 집중 감독

수당 미지급도 함께 점검

"대표는 법안카드로 회식을 하고, 비즈니스석 이상만 타고 다니는 데, 1년 중 월급날짜에 맞춰 월급이 들어오는 것은 딸랑 4번 뿐입니다."

고용노동부 악명제보센터에 접수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의 관할 내 A 기업의 임금체불 제보다.

광주노동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상습체불 사업장과 악명제보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등 2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감독 대상에 포함된 B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30여건 이상 상습체불이 발생했음에도 채용플랫폼에는 '월급+보너스=행복 2배'로 소개하고 구인을 하고 있었다.

광주노동청은 고의적인 상습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이나 초과근무 등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법위반(포괄임금 오·남용)으로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성룡 광주노동청장은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짜 야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를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서울시의회, 외부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해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등 촉구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부산·대구·전북·대전 등 5개의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민간위탁사업 회계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1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 조례를 신속히 원상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감사를 회계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단

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례 원상 복원과 국회의 신중한 세무법 개정안 검토, 정부의 법률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국회에 제출된 세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